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

2020. 12. 17.

관계부처 합동

순 서

1. 기획재정부	1
2. 교육부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4. 행정안전부	7
5. 문화체육관광부	9
6. 농림축산식품부	11
7. 산업통상자원부	13
8. 보건복지부	15
9. 환경부	17
10. 고용노동부	19
11. 여성가족부	21
12. 국토교통부	23
13. 해양수산부	25
14. 중소벤처기업부	27
15. 공정거래위원회	29
16. 금융위원회	31

기 획 재 정 부

① 코로나 위기 돌파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21년 예산 558조원, '20년 대비 +8.9%) 일자리·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63%) 추진
-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위기 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도 검토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병행, 질서있게 단계적 추진

② 철저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영

-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주요 대내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 대외신인도 및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수립

③ 소비·투자 진작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21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별도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를 '21년 상반기까지 연장
- '21년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75%까지 가속상각¹⁾을 한시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시 확대²⁾

1) (중소중견) 사업용 고정자산 75%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50%

2) (중견기업) 30→50% / (중소기업) 50→70%

- 취득비·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 우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 5G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20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④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20년 100조원)

- '21년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 규모로 확대
- '21년 17.3조원 민자사업 투자 발굴·집행

* 포괄주의 등을 적극 활용, 총 13.8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자투자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해 3.5조원 규모 집행계획 이행

- '21년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⑤ BIG3 성장동력화 등을 통한 제조강국으로의 도약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성장동력화 강력 추진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복지·금융위(5개부처 장관) + BIG3 산업별 기업전문가

6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본격 추진, 국민 체감성과 창출

- '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투자, 그 중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80%를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4조원 목표)을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으로 17.5조원+a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뉴딜금융 본격 확산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가시화

7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21.1/4)
 - 한걸음 모델을 제도화*하고, 1분기 중 신규과제를 적극 선정·추진
-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후 결과 등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8 인구구조 변화,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비

- 제3기 인구정책 TF 운영,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이행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 ❶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❷영아수당 신설, ❸첫 만남 꾸러미, ❹공공보육 확충, ❺다자녀 지원 확대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上)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정책(20여개) 추진전략 수립 지원('21.下)
- * 감축잠재량·기술수준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시나리오 마련

9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
- * 관행적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활용 중복성과미흡 사업 정비 추진
- 조달·국유재산 관련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 *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 수립,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출자기관 배당제도 합리화 등

10 공공기관 재무·인력 등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제도 법제화 등 재무건전성 관리 지속
- 공무직위원회 등을 통해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공공부문이 채용·임금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

교 육 부

①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21.下)
- 대학 등 학교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 확대¹⁾ 및 학습결과의 활용도²⁾ 제고

- 1) 소규모 사내대학 법제화, 원격대학 대학원과정 확대(일반·전문대학원 설치 등), 대학의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강좌 확대 등(K-MOOC 2.0 사업 등)
- 2)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정보 및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근거 마련('21 ISP 추진)

②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근거 마련

- 전국민 평생장학금 등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21.上)

- * 국가·지자체의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근거 마련,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③ 직업교육과 신산업·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 신산업분야에 특화된 선도전문대학* 12개교를 신규로 선정
- * 전문대학의 전문성·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산업변화 및 직무역량분석 등을 토대로 개별 기업, 지역사회 등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
- 직업계고¹⁾ 및 전문대학²⁾과 지역사회간 연계·협력을 통해 직업교육 혁신모델 마련

- 1) 직업계고-기업(선취업)-대학(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 성장경로 구축
- 2) 전문대학-기초지자체-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직업교육 강화 및 성인학습자 재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④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학교 안·밖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안)맞춤형 지원 두드림학교를 확대¹⁾하고, (학교 밖)학습센터와 연계 강화²⁾
- 1) (두드림학교)'20년 4801 → '21년 5000개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전국 130개소 운영중
- 2) 학습센터 전문가의 학교 대상 컨설팅 및 학교역량으로 지원이 어려운 학생 대상 심층 학습코칭·상담 실시 등 강화

5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에 무선 Wi-Fi를 설치하고¹⁾, K-MOOC 우수콘텐츠 확충 및 해외 유명강좌 접근성 향상을 추진²⁾

1) ('19) 8.2만실 → ('21) 일반교실 등 27.2만실 → ('22) 교과·특별교실 등 35.2만실

2) 신규콘텐츠 대폭 확대(누적 885→1,055개) 및 해외 유명강좌 개설

6 초·중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교원 디지털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21~)

* 학교미디어교육센터('22년 대구, '23년 충북·경기 개관 예정) 운영 등

7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 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학사)-석사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추진

*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 발표('20.11.27), '21년부터 2년간 전문대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도 조속히 개정

8 교육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2·3학년→전학년),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 및 각종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

* 교육급여 단가인상(평균 +24%) 및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10.9→12만명) 및 고졸 후학습 장학금(11.2→13천명) 확대

9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보급('21.上)

* 국어(어휘력 진단·보정 및 맞춤형 독서 수업 활성화), 수학(1:1 학습콘텐츠 추천 및 학습이력 관리), 영어(말하기연습 및 발음교정) 등 과목별 보급 예정

10 탄소중립 인식 등 실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교육 관련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부처 협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보급*

* 「교육부-환경부」 기후행동 생활 실천 모바일 플랫폼(기후행동 1.5°C) 운영을 통해 기후·환경교육 추진('20.11.~)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급별 교육자료 보급('21.상)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① 감염병·바이오 R&D 역량 강화

-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주요 분야(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기술개발 및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
- 신약·재생의료 기술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R&D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연구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원천기술 개발

- LEDS 부문별 정책과 연계한 '탄소중립 R&D 전략'¹⁾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집중투자²⁾ 및 장기적 혁신기술 개발연구³⁾ 추진

1) 신재생E, E효율, CCUS, ICT 활용 융합·혁신 등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21.1/4)

2) 「(가칭)2050 탄소중립 10대 R&D 프로젝트」 기획('21.2/4)

3)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고온수전해 광분해 열분해)·저장(물리흡착저장) 연구 착수('21.3/4) 등

③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역량 강화

-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지자체 주도형 R&D사업* 활성화 등 추진

* 중장기 시범사업을 확대(3→6개 지역)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형 사업 출범(1개 지역)

④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R&D 생태계 조성

- 임무 기반의 과감한 R&D를 추진하는 '혁신도전 프로젝트'¹⁾를 지원하고, 주요 기술분야²⁾에 대한 R&D 투자전략을 수립(~'21.3)

1) 도전적 R&D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령 개정 추진

2) 기후에너지, 소재, 센서, 양자컴퓨팅, 뇌연구, 감염병, 그린바이오, 자원기술 등

- R&D 우수성과에 대한 부처간 이어달리기 체계를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술 중개연구단, 대학 오픈랩 등 기술사업화 플랫폼 육성

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

- 초·중등생 수·과학 기초역량 증진¹⁾, 박사후연구원 등 성장²⁾ 지원

1) '수과학 교육 발전방안' 수립('21.下), (가칭)수학교육연구소 지정·운영('21.下~)

2) 박사후연구원 중심 연구단(KIURI) 지원 확대(4→6개),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

- AI·SW 핵심인재 양성*, AI교육 선도학교 선정(500개, 교육부 공동) 등 전국민 AI 교육

* AI 대학원 확대(8→10개), '인공지능 교육연구 허브' 구축, 한국형 교육모델 '프로젝트 X' 개발 등

6 데이터댐 등 디지털 뉴딜 본격 실행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이 각 분야로 확산되도록 '데이터댐' 고도화
 - *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25, 1,300종)의 전략적·체계적 확충방안 마련
 - (인공지능) 지역특화산업·국민안전·의료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AI+X) 확대·고도화
 -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협업하여 클라우드 기반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1, 5개)
- 디지털 뉴딜 및 데이터댐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

7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 추진

-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개발 등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유망기업(팹리스, IP)에 대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 * PIM : 메모리(저장)·프로세서(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
-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을 지원

8 비대면·가상융합 산업 육성 및 민간 보안역량 강화

- 「비대면산업성장법」을 제정하고,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특화기술 개발, 제조·건설·교육 등의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 XR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칭
- 민간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확대 병행

9 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및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 세제지원¹⁾, 품질평가 지역 확대²⁾ 등을 통해 '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및 인구밀집지역(핫스팟)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
 - 1) 신성장·기술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에 5G 장비 취득비, 공사비 등 포함(공제율 +2%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 세액공제 제공
 - 2) 품질평가지역 : ('20) 85개시 주요 행정동 → ('21~'22) 85개시 전체 행정동 → ('23) 전국
-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 5G 융합 시범서비스* 확대를 통해, 5G융합 디바이스 보급·확산 및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지원
 - * 공공 시범서비스 : ('20) 방역, 교육, 의료 등 5개 과제 → ('21) 신규 5개 과제 이상 추진

10 포용적 과학기술·ICT 정책 추진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운영(매년 1,000개), 과학문화 바우처 지급 확대(4.6→5만명) 등 디지털·과학문화 격차 해소 지원

행 정 안 전 부

① 지역균형 뉴딜 본격 추진

-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인센티브 시행('21년~)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간소화, 특교세 인센티브 제공, 지방채 초과발행 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창의적 뉴딜사업 발굴 지원

② 디지털 뉴딜과 지능형 정부 구현

- 국민의 행정정보 이용 편의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4.2만개) 및 품질개선 가속화
 - * 민원처리법 개정('21.10. 시행)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행정·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정부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5G 국가망 구축
 - * 기관별 소규모 전산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21.~)
- 모바일 신분증 도입·확산 등 비대면 경제 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AI 국민비서 서비스 등도 확대(9→39종)

③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재해 예방

- 디지털 기술(IoT·ICT) 기반의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재해위험지역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 관측·계측하여 문자, 마을 경보 등 제공
 - ** 유통·물류 ICT 기반 시스템 구축 및 7개 시·도에 지역통합관리센터 설치('21.~)
-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등 국민 생활안전 확보 노력 강화
 - * 지역내 노후·위험시설 80여개소에 IoT센서 550여개 설치 추진('21.~)

④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집행구조 개선,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집행(신속집행) 및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확장적 지방재정(추경) 운용
 - * 지자체별 '성립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절차 등을 1/4분기내 완료 협조 추진

5 지역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¹를 통해 청년고용을 지속 창출(2.6만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²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 확대(1.8만명)

1) 지자체 중심으로 기획·시행하는 상향식 일자리 사업('20년 2.6→'21년 2.6만명)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신설('20년 1.0→'21년 1.8만명)

6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9→15조원), 지자체 주도 착한 임대인 인증(지자체별 혜택 제공)*,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교세) 지원시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7 민생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대

- 재난·재해·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프라 정비 및 지속 확충

* 위험도로 구조개선(신규 10개소), 우수저류시설(신규 8개소) 설치 등

- 접경지역,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접경지역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신규 2개소),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 등

8 지방공공기관 투자소비 확대 및 상생문화 확산

- 지방공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정·합리적 거래 관행 확립

* 모범거래모델 도입 대상 기관을 기초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광역 46개→기초 107개)

9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마련

-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 구축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감면('21~'23년)

10 그린 리모델링으로 그린 청사 구현

-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저장장치 등)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스마트 그린 청사 조성*

* 노후청사 단열보강, 정부청사 울타리 숲 조성 등 온실가스 저감 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 문화강국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

- 실감형·지능형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서트 등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및 투자 확대
 - * (비대면 시대 대응) 온라인 전용 케이팝 공연장 조성(1개소) 및 온라인 공연 제작지원
 - * (인공지능·신기술 기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대·중소형 문화콘텐츠·서비스 제작지원,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기반 게임 지원
 - * (실감콘텐츠 개발) 콘텐츠 IP를 활용, 5G 위치기반 실감 콘텐츠 개발·서비스 제공

2 K-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차세대 수출 동력 육성

- 비대면 수출상담 및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 비대면 수출 확대
 - * 전 세계 핵심시장 소재 콘텐츠 해외거점(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7개소, 마케터 1개소) 활용, 현지 유력 플랫폼 연계 수출을 위한 상시 화상상담 지원
- '디지털 케이-콘텐츠 해외 지킴이 사업' 등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 *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수사 위해 인터폴·현지 수사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중소 콘텐츠기업 대상 저작권 피해방지 기술지원 및 해외 진출시 법률 컨설팅·소송 지원

3 비대면 시대 새로운 예술 생태계 조성

-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서도 예술·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예술 활동 지원
 - *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49.3억), 예술과 기술융합지원(47.5억) 실감형 공연전시 콘텐츠 제작(25억),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우수공연 온라인 확산, 10억)

4 글로벌 관광 경쟁력 제고 및 코로나 이후 관광 활성화

-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20년 1개소 → '21년 신규 3개소),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확대(300억원→450억원) 등 관광산업 혁신 경쟁력 강화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¹⁾ 도입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²⁾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

1) 교통거점 관광안내소 운영,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운영 등

2)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20년 159억 → '21년 383억원)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등 지역대표 관광 자원 개발(20억원)

5 문화·관광 분야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 영세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500억원) 등 피해지원 노력 지속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재기기원을 위한 코로나19 재기지원 펀드 조성(250억원)

6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비대면 산업 기반 조성

- 기존 거점을 총괄(감독·사업연계·통합상담 등)하는 '스포츠종합지원센터' 개소('21.2), 스포츠 기업 융자 대상 확대* 추진
- * 융자대상 확대 : 지정된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 용품업 전체
- 초실감·몰입형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기술개발¹⁾ 추진 및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육성 등 지원²⁾

1) 초실감 스포츠 중계 기술, 비대면 다자 참여형 스포츠 경기 기술 등

2) 비대면 스포츠코칭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공, 인력양성, 사업재설계 등

7 숙박·체육 분야 소비 활성화

- 숙박·체육 할인권을 확대하여 위축된 소비시장 회복에 기여
- * 숙박쿠폰 : 100만장 → 145만장 / 체육쿠폰 : 40만장 → 60만장
- * 체육쿠폰의 경우 온라인 PT 등 비대면·온라인 구매·사용 허용 등 대상 확대

8 누구나 문화·체육·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통합문화이용권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 수혜인원 7.2만명('20년 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문화 지원 강화
- 장애인·고령자 등의 문화격차 해소와 기본적 문화생활 보장
- * 무장애(barrier free) 문화예술 공연장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 조성 확대('21년 20개소) 등

9 대체자료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의 학습권, 이동권 제약,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 * '도서', '전자책', '정부간행물', '연속간행물' 등 대체자료 제작 다양화 ('21년 약 8,550책/편 제작)

10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 ICT 활용 공립박물관·미술관 스마트 시스템 구축('21년 65개관) 및 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21년 18개관)

농 립 축 산 식 품 부

①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식량계획 수립

- * 국내 식량 생산 기반 확충, 국제곡물 위기 대응역량 제고,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확산,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등
- 밀·콩 비축 확대, 국산 밀 생산·유통·소비 등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 추진
 - * 밀/콩 비축량 : (‘20) 3천톤 / 17천톤 → (‘21) 10 / 25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대상 확대(‘20년 1.8만 → ’21년 2.8만 가구)

②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강화

- 「제2차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2~’31)」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3,200대)
 - *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 재해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보강

③ 저밀도 사회 대비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 축사·공장·신재생에너지 등의 철거·이전, 읍면 소재지 생활 SOC 확충 등을 추진하는 농촌재생뉴딜*(신규, 5개소) 착수
 - * 축사·공장 등의 입지, 생활서비스 시설 접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1년차)
- 농촌 특화 보육시설(‘20: 74개소 → ’21: 107개소), 사회적 농장(‘20: 30개소 → ’21: 60개소) 등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보완

④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회복 지원

- 농산물·외식 소비쿠폰을 확대 발행하고, 소비형태 변화(비대면·1인식 등) 대응 및 온라인 수출 지원 노력도 가속화
 - * 농축산물 할인쿠폰(20%), 외식소비 쿠폰(660만장), 외식업체 컨설팅(1천개소)

⑤ 농가 금융지원 및 농업인 복지 강화

- 농업분야 여신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신보 출연(신규, 1,300억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20: 월 최대 43,650원 → ’21: 45,000원)

6] **농식품 분야 창업 및 귀농귀촌인 적응 지원**

- 청년농 대상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공급 확대('20년 1ha이하 → '21년 2ha 이하) 및 모태펀드 출자 확대('20년 350억원 → '21년 400억원)
- '농촌에서 미리 살아가기'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적응력 제고
* 귀농귀촌 희망가구에 6개월간 농촌생활 체험 지원(500가구, 임시주거 및 연수비 월 30만원)

7] **스마트농업 거점조성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1차: '21.6월, 2차: '21.말), 청년농 임대 온실 제공(6ha/개소) 및 청년보육생(100명/개소) 선발·교육 등 본격 가동
- 스마트팜 R&D*,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3개소, '21.6월~), 해외 현지 한국형 스마트팜 데모온실 조성(2곳, ~'21.말) 등 추진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융합·원천기술 연구('21~'27, 총 3,867억원, '21년 445)

8] **기술·인력 등 유망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식품분야 R&D 투자 확대('20: 172억원 → '21: 313) 및 계약학과 운영('20: 2개소 → '21: 4개소, 미래식품·푸드테크 추가) 등 전문인력 양성 강화
- 김치 품질 향상을 위한 종균보급체계 구축 및 종균 보급(신규, 12억원)

9]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

-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의무자조금 품목('20: 14개 → '21: 16개)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20: 15% → '21: 17%)
- 도매시장 집중 유통구조 분산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시범거래 확대*,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축산물) 등 추진
* '20년 양파·마늘·사과 → '21년 1~2개 주요 채소·과일 추가

10] **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악취 관리 강화**

-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內 양돈농장 등 방역시설 보강(전년 대비 24억원 ↑), 가축질병 검사시설('20년 1곳 → '21년 3곳) 신축 지원
* 울타리·전실·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8종) 설치 의무화('20.10)
-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20년 155개소, 자부담 30% → '21년 330, 0)

산업통상자원부

① 무역금융 지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수출활력 총력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55.8조원 집중 지원
- 화상상담 등 디지털·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 필수인력의 국가간 이동 제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20년→'21년) 등

②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기업 중심 지원제도 개편

- 첨단산업 등 유턴시 인정요건 완화, 비수도권 보조금 확대
- 수요기업과 부품 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 창출
-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유턴기업*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투자·고용증대 효과, 국내 공급망 등 고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지원 강화

- 선제적·신속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 수요-공급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

* 사업재편 전용 R&D 및 펀드 우선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우선추천 등

④ 스마트그린산단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기능강화

- 디지털·친환경화를 촉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21년 3개 내외)
-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첨단·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전용용지 입주 등

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디지털화 가속화

- (친환경화) 투입·공정·순환 등 밸류체인 전반의 친환경 전환* 추진

* 클린팩토리 구축('21년 300개), 생태산업 개발 및 재제조 시장 확대 등

- (디지털화) 산업 전반의 데이터·5G·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 확대

* (예) 신소재 개발(철강·바이오·섬유·화학 등), 생산공정 혁신(조선·철강 등)

6 혁신성장의 아이콘 BIG3(반도체 · 바이오 · 미래차) 신산업 적극 육성

- (반도체) 미래기술개발, 전용펀드, 인프라 등 맞춤형 지원*
* (기술) PIM 기술개발, (펀드) 상생펀드(500억원), (인프라) 설계지원센터(10→20개社)
- (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등 추진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23년 완공), NIBRT 시범교육 실시('21년 100여명)
- (미래차) 전기·수소차 수요기반 확충* 및 미래차 사업재편 지원
*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상향,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7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對세계 338개+a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및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 기술확보·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전략기술 R&D 세액공제
* 핵심기술 추가 선정 및 R&D 지원, IP-R&D 의무화, 테스트베드·양산평가 지원 등
- 으뜸기업 육성('21년 20개 이상), 해외 수요기업 협력 등 글로벌 진출 지원

8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탄소중립 대응

- 디지털·그린뉴딜*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견인
* (디지털)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그린)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 탄소중립 시대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산업 등 미래전략 수립

9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FTA 활용 확대

- 韓美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과의 FTA를 확대하고 활용 지원 강화*
* 무료 컨설팅 대상 확대,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 선정 등 맞춤형 지원

10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제주체간 연대 · 협력 확산

- BIG3·소부장* 등 산업 쏠분야의 기업간 협력모델을 확산하고 협력형 유턴·공동 사업개편 등 지원수단 강화
* (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회 구축 (소부장) 신규 협력모델 추진('21년 20개이상)

보 건 복 지 부

① 지속가능한 방역정책 추진

-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설정하고, 방역정책의 지속적 정교화 추진

② 공공의료 역량 강화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대¹⁾ 및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보강²⁾

1)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권역 12개·지역 29개→권역 15개·지역 35개)

2)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필수 공공의료 분야 인력 양성

③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 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운영(BIG3 추진회의 바이오 분과)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23년 완공)하고, NIBR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범교육 실시(100여명, '21.下)

④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적 활용 생태계 조성

- 시범사업('20~'21, 2.5만명)을 거쳐,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추진(대상 선정평가: '20.11~'12 → 본예타: '21.1~'7)
- 가이드라인 개선('21.3), 결합전문기관 운영, 데이터 큐레이터 양성 및 중장기 전략 수립('21.上)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현장 지원

⑤ 소득 안전망 강화

- 한부모·노인 기초생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¹⁾, 기초 노령연금 최대 지급액(30만원) 지급대상 확대('21.1~)²⁾

1)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21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

2) '20년 소득하위 40% → '21년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대상 30만원 지급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시행하고,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도입 준비

6 건강 안전망 강화

- 의료급여·건강보험·요양보험 등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블루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지원('21년~)
- * (의료급여)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 흥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MRI 급여화 (요양보험)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2,772억원)

7 돌봄 안전망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43→50만명)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21.1~)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71→81개), 학대피해아동 쉼터(76→91개) 확대('21.1~)
-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 개발 지원, 우수사례는 타지역으로 확대 ('21.12)

8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목표(당초 22년)를 조기 달성(74→80만명)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2.2→2.5만명) 및 연금지급단가 인상(25→30만원)
- '21년 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 6.3만개 확충

9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 주도로 관리(통합·열람·다운로드)하고 진료,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 기반 구축
- 스마트병원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추진하고, AI기반 중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어르신·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및 IoT, AI 기반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추진

10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완화하여 전반적 삶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등을 본격 마련·추진('21.1~)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고령친화기업 선정 및 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추진

환 경 부

①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기반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방향 (에너지·산업·수송 탈탄소화, 순환경제 등)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 * 부문별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30NDC 상향도 조속 추진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감축잠재량 산정 등), 인식·참여 확대,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구축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② 그린뉴딜 본격 추진

-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3대 핵심사업 역점 추진
 - * ①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 보급, ②녹색기업 전주기 지원, ③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탄소중립 패키지화*·분야별 보완과제 발굴 등 그린뉴딜 지속 보완 및 성과점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체계 구축
 - * (EU 그린딜) ①2050 탄소중립 목표, ②분야별 이행전략, ③재정투자 계획의 패키지 제시

③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 플라스틱 감량·재활용 등 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추진
 - * (감량) 코로나19로 증가한 택배·포장재·1회용품 등 관리 강화로 원천 감량 추진 (재활용)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
- 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우려 근본 해소
 - * (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가격연동제 의무화, 공공 책임수거 체계 구축, (선별) 선별업체 확충·현대화 지원, (처리) 주민·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④ 미래차 대중화 조기 달성

-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21년 80%), K-EV100* 활성화 등을 통한 수요 확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 등 공급기반 확충
 - * 기업이 '30년까지 보유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 연료비 지원,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21년 누적 전기 3.6만기·수소 188기) 및 저감효과 강화·가격인하 등을 위한 보조금 개편

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강화

- 지역특화형 저감정책(충남 석탄발전 등) 추진, 사업장·노후차량 규제 이행지원 확대* 등 미세먼지 정책 고도화 및 중장기 대책 마련
 - *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시멘트업계(10개소) 지원, (노후차) 경유차 조기폐차(34만대)·배출저감장치(9만대)·LPG차 구매(2만대), 건설기계 엔진교체(7천대) 등 지원

-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 감축설비 지원 등 감축이행 강화 및 취약업종 적응 컨설팅 등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추진
- * 3차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3→10%) 및 배출효율기준(BM) 할당(7→12개 업종) 확대

6 통합물관리 체감 성과 창출

-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ICT 기반) 구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 * 지방상수도 스마트 인프라 구축(44개 지자체) 및 광역 정수시설 고도화(9개소)
-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방어계획 수립, 댐 스마트 안전관리 (AI·드론 등 활용)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풍수해 대응체계 전환

7 생태보전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25개), 도시 훼손지 생태복원(2→8개소, 도시생태복원 25+ MOU 체결)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제공
-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 고품격 친환경 인프라* 확충, 생태관광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 * 친환경 체류시설(에코캐빈·에코라지 등), 가족 단위·교통약자를 위한 하늘탐방로 등

8 화학사고·화학물질 관리 효율화

- 노후산단 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적외선 카메라·AI·드론 등) 도입 등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 효율화
- 국제적으로 평가 완료된 살생물물질(115종) 승인 간소화, 국민 참여 불법화학제품 감시체계 구축 등 화학물질 관리 고도화

9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

- 녹색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쏠주기(창업-성장-해외진출 등) 지원
-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녹색 소재·부품·장비 로드맵 수립, 녹색금융 가이드라인·환경책임투자 평가체계 등 혁신 생태계 구축
-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미래폐자원, ⑤자원순환(脫플라스틱)

10 기후·환경 국제 리더십 확보

- 제2차 P4G* 정상회의('21.5, 서울선언문 도출 등), 제4차 UNEP 아·태 환경장관포럼('21.10) 성공개최로 국제적 기후·환경 리더십 발휘
-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고 용 노 동 부

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적극 대응

- ① 일자리 예산을 30.5조원('20년 25.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04만개('20년 본예산 94.5만개) 제공
- ②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하고, 10인 미만 기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용유지지원금 규모(조원, 본예산) : ('20) 0.04 → ('21) 1.4
- ③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확대(5→8개 지역)
* 최대 5년간, 年 40~140억원 지원

②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설계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21.上)
-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20.12월)을 기초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적 안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총 59만명)을 대상으로 일경험 등 취업지원 및 소득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21.1.1~)

④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체계 개편

- ① 「K-Digital 직업훈련」*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뒷받침을 위한 직업훈련 혁신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K-Digital Training), 구직·재직자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K-Digital Credit) 및 디지털 융합훈련 공유 플랫폼(K-Digital Platform) 신설
- ② 한국판 뉴딜 관련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정부 인력양성 사업을 효율화하고 인력양성 트랙 구축('21.1~)

⑤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 ①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
-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 전 국민 대상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⑥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① (청년) '구직-채용-근속' 단계별 청년 고용지원 확대

* (구직)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명< I 유형 10만명, II유형 13만명> (채용)청년추가 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디지탈일자리 5만명 (근속)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② (여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21년 84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3번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 인상(월 30→40만원, 당초 육아휴직 1호만 40만원 지원)

③ (고령자) 재취업지원 의무화 기업 등에 컨설팅,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제도 도입·운영 지원('21년 신설, 450개사, 49억원)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규모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 ('20) 75개소 → ('21) 90개소

⑦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에 노출된 취약부문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추진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등 직종별 건강진단,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 특고 종사자가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보호 범위 대폭 확대¹⁾ 및 전속성 기준 개편²⁾

1) 적용제외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

2)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 (개선)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방안 마련

⑨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위험기계·공정 개선¹⁾, 산재예방 시설·장비 설치 등 지원²⁾ 및 패트롤카 대폭 확충³⁾

* 1) ▲3대 위험기계 교체(4,911대)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921개소)

2) 30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시설용자(1,830개소) 3) ('20) 27대 → ('21) 404대

⑩ 주52시간제 정착 지원

- '21.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조기 단축 지원 및 법 준수 분위기 확산

*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희망 기업에 노무사 무료상담 지원('21년 1,400개소)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게 1인당 20만원×6개월 지원('21년 375개소)

여 성 가 족 부

① 재직여성 개별 맞춤형 경력유지 및 경력이음 지원 확대

-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 운영(2~3명)을 통해 임신근로자 사례관리, 직장복귀 프로그램 등 경력단절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수행기관 15개소 내외 추가, 경력단절예방 팀(2~3명) 구성·운영
-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을 전체 구직자로 확대하고, 대상별·단계별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마련

②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지원(직업훈련-인턴십-사후관리) 강화

- 경력단절여성 특화 미래적응형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신규 도입, 고숙련·고부가가치 장기 교육훈련과정 지속 운영
- 경력단절여성 인턴 지원금 확대(300→380만원) 및 부처별 경단여성 특화 전문인력 양성, 해당 분야 기업 인턴 연계, 사후관리 등 부처 협업 지원

③ 기업 내 성별다양성 기반 강화

- 기업 내 성별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단지지역 내 중소기업 등 대상 컨설팅 지원('21년 경북 산단 지원 예정)
*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및 문화 개선 위한 현황진단과 맞춤형 제도설계, 이행지원까지 단계별 컨설팅 지원

④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디지털 수요가 많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15종) 및 보급,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인력 22명 증가) 및 지역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 아동·청소년 성적 이용·착취 위한 유인 과정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운영

⑤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반 구축

- 스토킹 등 기존 실태조사에 누락된 여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신규 실시(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 추가 여성폭력 파악)
- 기관별 시행계획 분석·평가 및 현안 이슈 분석 등을 통해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여성폭력 방지정책 실효성 제고

6 청소년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역할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9→15개소) 등 지자체 중심 공적 운영체계 강화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립 활동비 신규 지원(연 50만원 이내), 퇴소 시 자립지원 수당 신규 지원(월 30만원)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유지원을 위한 지역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건립(1→2개소, 1개소 신규 건립)

7 가족 형태별 맞춤형 자녀돌봄 지원 강화

- 부모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연대하여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268→332개소) 및 지역공동체(33→43개) 확대
- 맞벌이 가족 등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720→840시간) 및 비율 확대
 - * 정부지원비율 :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 다양한 가족 대상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단위 가족센터 확대(67→92개)
- 한부모 및 장애부모·아동(중위 75%이하) 아이돌봄 정부지원비율 5%p 상향(영아·미취학 가형 85→90%, 취학 가형 75%→80%)

8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에서 청년한부모(만 34세 이하)까지 확대

9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282→312명) 및 사례관리사(174→208명) 확충 등 특성화 사업 확대로 통번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강화
-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위한 사전 연구 추진

10 성평등 공공외교 기반 마련

- 글로벌 성평등 및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써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정례화

국 토 교 통 부

1 국토 균형 발전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 5곳에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 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착수
- (도시재생 뉴딜) 노후 주거지 생활 개선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약 1.8조원을 투자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 기존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화지원, 소규모재생사업 통합·시행(75개 → '21년 80개)
- (혁신도시) 공공기관 선도 협업과제를 통해 지역특화발전을 확산, 복합혁신센터,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국토부 소관 도로·철도·공항 등 15개 사업(총 사업비 21조 7,340억원, '21년 예산 3조 8천억원)을 신속 추진

2 디지털 뉴딜 추진

- 도로·철도·하천·공항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도시·물류 등 스마트화 추진, 3D지도* 등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 ①3D 지형지도를 전국 도심지에 구축, ②3D 건물지도 구축 기본계획 수립

3 그린 뉴딜 추진

-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집중 추진
- 수소도시 본격 추진 및 수소상용차(버스·택시·화물) 연료보조금 도입¹⁾,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차 충전소 구축 13기(누적 39기) 구축²⁾
1) (버스)'21년 100대 이상 시범사업 이후 '22년부터 도입, (택시·화물차) '23년부터 도입
2)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60기 목표 = 국비+민간 39기 + 도공현대차 8기 + 휴게소운영자 13기

4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구입자금·전세자금의 저금리 융자 지속
* (청년) 청년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 (신혼부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5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수도권 127만호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해 신속한 수급안정을 도모, 전세형 공공임대, 질 좋은 평생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적극공급
-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기반 정비, 임차보증금 리스크 완화 등 한계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6 배달·대리기사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스마트 물류 추진

-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배달업 인증제 도입 등 운송 노동자 보호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스마트 물류 추진

7 항공산업 지원

- 항공산업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 본격 가동 및 항공산업 기여도, 코로나19 피해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원 추진

8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등 혁신성장 추진

-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도심 내 드론 물류배송 등 실증 개시, 스마트도시법 개정* 및 자율주행차 활용을 위한 도로, 제도 등 완비

* 규제 신속확인 절차 마련, 지자체 출자특례 마련 등(스마트도시법 개정, '21년 상)

9 해외 건설 활성화

- 해외 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강화, PIS펀드 1.5조원 조성 등을 통해 해외건설 지원 강화

10 국토교통 민간투자 활성화

- (도로) 적격성조사(시흥~송파 등 6건) 및 제3자 공고(사상~해운대, 평택~시흥 확장), 협약체결(서창~김포, 오산~용인 고속도로) 등 신속 추진
- (철도) GTX, 신안산선 등 추진 중인 민자사업들이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민간제안 등 철도 민자사업 적극 발굴

해 양 수 산 부

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기후변화 총력 대응

- 친환경 관공선 건조(9척), 민간보조금(최대 20%) 지원 및 친환경 선박·기자재에 대한 국가인증제 도입으로 선박 친환경 전환 촉진
- 제4차('21~'25)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21.下)

②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및 생태계 복원

-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확대, 어구 일제회수제도 및 어구보증금 제도 법제화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 및 「수산업법」 개정 추진
- 해양생태축 설정·관리방안 마련('21.下), 갯벌생태계 복원 확대 (총 1.9km²) 및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 조성(6종 14개소)

③ 해운-수출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기반 확립

- 1.6만TEU급 '컨'선 8척 투입('21.4~6), 장기운송계약 및 우수 선화주 인증지원 확대, 선적공간 확보로 수출기업 지원
- '해운산업 시장질서 확립 방안' 마련('21.3) 및 부당운임, 불법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해운시장 질서 확립

④ 부산항 신항 등 항만인프라 조기 확충

- 부산항 신항 등 지역 거점항만 확충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부산항 제2신항 예타 추진 및 서컨 2단계 개발준설 준공,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3선석 착공, 새만금 신항 매립호안 준공 및 관리부두 착공, 울산신항 남방파제 2-3 착공 등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부산북항·인천내항 등) 및 항만배후단지* 적기 조성
*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실시협약, 인천신항 및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착공

⑤ 수산물 소비 및 수출 촉진

- 대규모 소비쿠폰(390억원) 발행 및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에서 구매 지원(20% 할인)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가격안정화
- 온라인 수출지원플랫폼¹⁾ 운영으로 수산물 수출거래 종합 지원,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성장 지원체계²⁾ 구축

1) 디지털기반 전시·상담·계약 등 지원, K-씨푸드 판매 전용관 개설(5개)

2) 수출 성장-고도화 대상 기업을 선정, 수출 활성화 자금 지원

6 수산·어촌 활력 제고

- 수산공익직불제* 최초 시행, 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월 4.5만원), 귀어귀촌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 어업인 지원 강화
*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어업인에 年 150만원 지급,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 등
- 어촌뉴딜300('21. 신규 60개소) 확대 및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21.上),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수산식품클러스터(전남 등) 조성

7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 (해운·항만) 자율운항선박 R&D(~'25),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예타), 스마트 물류센터(인천항 설계), 항만 디지털플랫폼(ISP 수립) 구축
- (수산·어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계속 3개소, 신규 2개소), 수산물 스마트 유통·가공R&D('21~'25), AI어업관리시스템('21~'23) 추진

8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유망기술 기반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R&D 확대 및 성장 주기별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해양수산 신산업 기업 육성
*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지원,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
- 해양바이오 항바이러스 소재 등 발굴 R&D('21~'25), 산업화 지원 인프라 조성*,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21~) 추진
*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조성, 해조류 유래 바이오소재 생산시설 구축

9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거점·해양치유센터·어촌테마마을 등 권역별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마리나·크루즈·어촌체험 등 핵심 콘텐츠 육성
-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양관광 확대

10 해양안전·방역 강화

- 바다 내비게이션(e-Nav) 대국민 서비스* 개시('21.1.30), 노후어선·원양어선 현대화 및 기술·장비보급과 안전 우선 조업문화 정착
* ①충돌·좌초 예측경보, ②최적항로 안내, ③전자해도 최신화, ④해양안전·기상정보 제공
- 코로나19 항만 방역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해양수산청·세관·PA 등) 협업 강화 및 외국인선원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효율화

중 소 벤 처 기 업 부

1 혁신 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 발굴 목표, '21년 200개를 발굴하여 부처간 협업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21년 1조원 조성
- (K-유니콘프로젝트)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 '21년 아기유니콘 선정 60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30개 내외 선정·지원

2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창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가동,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외국인 국내창업 촉진,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등
- (벤처)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벤처투자 표준 계약서 도입, 벤처확인제도 민간중심 시행, 복수의결권 도입 등

3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 스마트상점·공방* 확대, 라이브커머스·구독경제 활성화, 동행세일 등 온라인 소비 축제 개최, 비대면 업종 재창업 지원 강화 등

* 스마트상점 약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구축

4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자생력 강화

- (경영개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3조원), 0%대 결제 수수료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산(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
- (재기지원)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법률상담 확대(3→4천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1,200명 신규, 1천만원)

5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 (마이제조데이터)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구축, 제조혁신법 및 제조데이터공유규범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 (선도사례 확산) K-스마트 등대공장, 5G+AI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성공사례 창출·확산

* '21년 K-등대공장 10개, 5G+AI 스마트공장 100개, 디지털 클러스터 10개

- (스마트 리쇼어링) 유턴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및 로봇 연계 지원(기업당 최대 11억원), 유턴 전략품목 발굴 및 R&D 집중 지원

**6 한국판 뉴딜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 (규제자유특구)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을 병행한 디지털·그린 등 뉴딜 특구 지정 확대로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 수행
- (지역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및 연계지원, 스타트업 타운 등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 (지역뉴딜 벤처펀드) 지역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원으로서 지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7 중소기업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 온라인·비대면 수출 지원체계 강화, 브랜드K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해상물류 운송지원 고도화

8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 저탄소·친환경 분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그린 스타트업 2,000,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그린 스타트업 타운(2개소)
-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그린 금융 패키지 공급

9 자상한기업 발굴 확산 등 상생기반 확충

- 자상한기업 발굴·확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개선¹⁾,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제도적 기반마련²⁾(상생협력법 개정) 등

1) 지정여부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 참여 일시정지 권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예외적 신청 허용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

2) 상생협의회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지원 등

10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마련

-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 등을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수립('21. 1/4분기)

*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사례 발굴, 블록체인 R&D 지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① 플랫폼 분야 갑을문제 해소

- 플랫폼기업-입점업체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추진('21.1/4 국회제출)

*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불공정행위금지 규정, 표준계약서·분쟁조정제도 등 도입

②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감시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시 엄정하게 조치

* (예)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방해하는 행위 등

③ 플랫폼 분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 플랫폼의 거래관여도 및 역할을 반영한 책임규정 정비, 임시중지명령제도 확대 등의 내용 포함

④ 배달앱 등 생활밀착형 시장 소비자약관 개선

- 배달앱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 사전통지 없는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

- 렌터카(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렌터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고수리비, 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예방

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를 통한 갑을관계 개선

-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¹⁾하고,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²⁾ (하도급법 개정)

1)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2) (현행) ①공급원가, ②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 비용 변동 시 조정신청 가능
(개선) ①+②+단계적 대금 인하계약 체결 후 원가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 신청 가능

6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 운영

-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애로·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센터 개소 및 운영('21.상반기)

*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갈등 예방 및 완충, 영세 피해점주 소송지원 등

7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보급 · 확산

- 공정거래협약 체결 영역 확대 및 업체 대상 선제적 소통 진행을 통해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사전 방지 및 상생협력 유도*

* (현행) 사업자의 분쟁 예방 유인 낮음

→ (개선) 협약평가상 분쟁 예방 노력 비중을 확대하여 우수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8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 대리점 분야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¹⁾하고, 상향식 제·개정 절차도 신설²⁾ (대리점법 개정)

1) '20년 식음료·제약·통신 등 12개 → '21년 18개(6개 업종 신규 도입)

2) (현행) 공정위 주도 하향식 제·개정 → (개정) 하향식 + 상향식 제·개정

-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사용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실시 병행

9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투자 목적의 M&A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적극적 투자 유도(공정거래법 개정)

* 벤처기업 등에 대한 1/3 미만의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자금모집 성격에 불과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행위 등

10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마련

- 일감개방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SI 등 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 SI거래의 기본 원칙, 상시 준수사항, 발주 상황·단계별 체크리스트 등

금 융 위 원 회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지속 추진

-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8조원까지 확대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
-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매입대상 확대 등

2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금융위험의 선제적 관리

-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21.1/4),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시행
 - * ①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 ②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단계적 대체, ③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 선진화
- 대출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여력 보강 유도

3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 단계적 추진 검토

-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
 - * 예 :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21.3월), 금융권 규제 유연화(~'21.3월/6월 등)
-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 병행 및 질서있게 단계적으로 추진

4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뒷받침

- 혁신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7.3조원을 집중 공급('20년 대비 9.1조원 확대)
- '21.3월부터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21년중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21.3~)

6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을 고려한 디지털금융 확산**

- 양질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1.2)
- 혁신 디지털 금융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7 **자본시장 역할 재정비**

-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20.8~) 하고, 위법·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 신속히 조치

8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 지속**

-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
 -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21.7)
- *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9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 영세·소상공인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21.12)
- * 중기부 등 관련부처, 가맹점 및 소비자단체,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1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뒷받침**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1조원 확대(‘20년 2.7조원 → ’21년 3.7조원)